

4월말 남북정상회담... 한미연합훈련은?

김정은 “이해·조절 기대”... 회담 전 훈련 마무리 관측도... 美 “예정대로 재개... 구체적 조치 있어야”

남북이 4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남북대화가 훈풍 기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외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전되면 한미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에서도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 비난하고 무력 도발을 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지난해 3~4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동청리 일대와 원산 갈마비행장 일대, 함경남도 신포 일대 등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군 관계자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4월1일 독수리훈련(Fal Eagle·FE)을 시작으로, 4월23일 키리졸브(KR)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독수리훈련은 3월1일부터 8주 가량 진행됐고 키리졸브 훈련은 3월13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북이 4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과도한 훈련 홍보를 자제하는 이른바 ‘로우키(low-

key)’로 가면서 회담 전에 훈련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4월 말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정한 것도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할 부분이다. 백악관은 이날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관리는 6일(현지시간) 전화 기자회견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방위적 공동 군사훈련을 계획대로 재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와 관련한 최소한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한국의 특별사절단에 밝혔다”는 내용을 한국 정부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미군철수와 같은 불필요한 언

급을 하며 예전의 태도와 변함없다는 모습도 함께 보였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도 같은 날 발표한 대북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현재까지 미국은 훈련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길 원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다만 북미대화의 진정과정과 따라 훈련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외청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방미단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후에 더 구체적인 한미연합훈련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시스

트럼프 “남북 발표 긍정적... 미국은 준비됐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동의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과 재래식 무기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총리와 만나 기자들에게 “한국과 북한에서 내놓은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게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야 했다면서 “상황이 풀이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는 안된다(We cannot let that situation fester. We cannot let it happen)”고 말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이 “아주 멋졌다(terrific)”며 “그것(북한의 올림픽 참가)이 모멘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희망컨대, 우리는 매우 평화적이며 아름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을 갈 필요가 있든 우리는 준비돼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당히 곧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 정부가 방북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핵프로그램 포기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후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된 모든 이들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다! 헛된 희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 방향이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있다”고 올렸다. /뉴스시스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비핵화에 중요한 고비... 낙관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5당 대표에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여야 5당 대표 회동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신보도와 트위터 등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지 의견을 들려주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단이 돌아왔다”며 “그 방북 결과에 대해 대표님들께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총무전실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차담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비례미래당 유승민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의석 줄어든 시·군 “대표성 훼손 선거구획정 반대”

“농촌주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을 결사 반대한다”

부안과 순창·군산·김제 등 도내 4개 시·군의회 및 주민들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농촌지역 지방의원 정인 축소는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최근 전북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보면 전주지역에서는 현재보다 4명이 늘고, 군산과 김제, 순창, 부안지역의 시군의원은 각각 1명씩 줄어든다. 나머지 다른 시군의회의 의석수는 변화가 없다.

이들은 “도내 기초의원정수 197석은 변동이 없음에도 전주는 4석이 증가하고 우리지역에서는 각각 1석씩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이 농촌지역 주민대표성을 훼손하고 합리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졸속한 획정안 폐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 도의원 정수 확대를 이유로 기초의원을 4명 증가해야 하는 법적인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며 “더욱이 의석이 줄어든 순창과 부안은 전주시보다 인구 감소폭이 적다는 점에서도 명분 없는 조치다”고 비판했다.

또 “농촌지역만 의석을 감소시킨 것은 심각한 농촌주민 대표성 무시가 아닐 수 없고 인구가 적은 농촌이라는 이유로 주민대표성까지 무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이번 조정안이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시스

“개헌 시 ‘지방재정 지역격차 해소’ 포함돼야”

김광수 의원,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 위상강화 문제도 지방분권 필수적 사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의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개헌방향과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 문제이며, 이번 개헌에서 ‘지방재정 지역격차 해소’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 위상강화 문제도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뒤 20여 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사실상 예측, 국가발전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머리만 기형적으로 큰 가분수처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으로, 정권마다 특별법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했으나 어느 정권도 특별법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례로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북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년간 25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국, 중앙에 예산을 채 재정이 과탄적전까지 내몰리는 지방정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국가 특성으로 규정하는 개헌을 진행해 중앙집권적 국가적 경향을 청산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